

##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(농업·농촌 분야)

○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8월 13일에 이어 8월 20일에 123대 국정과제별 주요 내용을 담은 「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」을 발표함.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4개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
- ①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: 쌀·식량작물 적정가격 유지, 스마트농업 확대, K-푸드 수출,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 및 농축산물 유통개혁 추진
- ②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: 농가 소득 기본 안전망 보강,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, 농업재해 국가 책임성 강화, 농가 경영비 부담 최소화, 농업 세대전환 촉진
- ③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: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, 농어촌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확산
- ④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: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조성,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·지역의 동물진료 공백 최소화

### 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정과제 주요 내용 ■

과제	주요 내용
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식량안보 강화: 식량 자급률 목표 상향, 농지 면적 보전 의무화 및 법적 제도화</li><li>식생활 돌봄 대상 확대: 농식품바우처 대상 확대 (차상위계층 임산부·영유아·아동·청년 가구까지, 아침밥은 산단 근로자까지)</li><li>스마트농업 고도화: 중소농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팜 개발, 농산업 신산업분야 R&amp;D 확대</li><li>K-푸드 수출 확산: K-푸드 거점 재외공관 지정 확대, ODA·문화 마케팅 연계, 수출 주력 품목 육성 등</li><li>유통구조 혁신: 도매유통 50% 이상 온라인 전환, 스마트 산지유통센터(APC) 확대 등</li><li>친환경농업 확산: 가축분뇨 퇴비화·탄소중립직불제 도입</li></ul>
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소득안정망 강화: 공익직불 확대 및 가격안정제 도입</li><li>재해 국가책임제 도입: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는 재해보험료 할증 시 제외, 재해 복구 지원 강화 등</li><li>경영비 부담 완화: 필수농자재 지원체계 구축,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기간 확대, 공동영농법인 육성</li><li>농업 세대전환: 예비농업인 제도 도입, 퇴직연금형 저축 도입, 농지이양은퇴직불금 단가 인상 등</li></ul>
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농촌 재생 지원: 농촌특화지구 육성, 빙집 재생, 재생거점마을 조성,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확대 등</li><li>재생에너지 확산: 햇빛소득마을,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</li><li>혁신 일자리 창출: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, K-헤리티지 관광벨트 구축, 국가정원 확충 등</li><li>필수서비스 공급: SOC 인프라 확충, 찾아가는 서비스 등</li><li>기본소득 도입: 인구감소지역부터 햇빛·바람 연금과 연계한 기본소득 단계적 확산</li></ul>
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동물복지 정책기반 강화: 「동물복지기본법」 제정, 동물복지 진흥원 설립 등</li><li>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: 공공동물병원 조성,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 등</li><li>건강한 반려문화 확산: 동물학대자에 대한 사육금지제 도입, 생산업 허가 갱신제 도입 등</li><li>연관산업 육성: 수출·창업 지원을 위한 「반려동물연관산업육성법」 제정</li></ul>

출처: 국정기획위원회(‘25.08.2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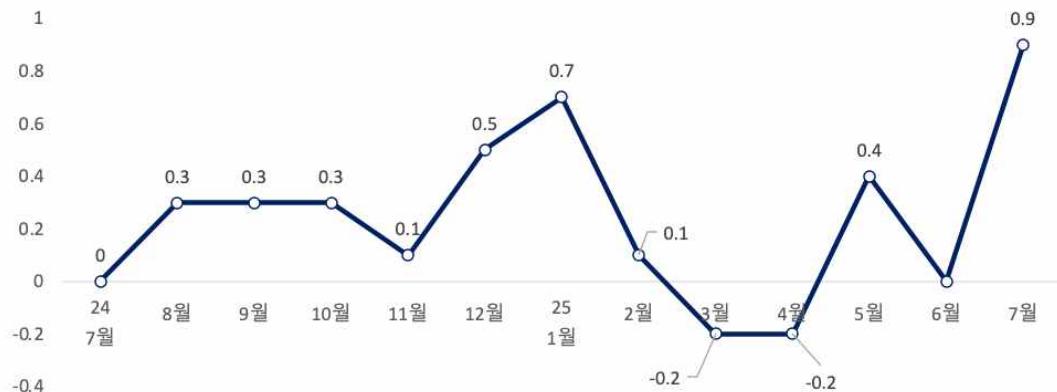


## 세계 경제 동향

### ● 미국 7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 대비 0.9% 상승 | 2025-08-14 미국고용통계국

- 2025년 8월 14일 미국 고용통계국은 7월 미국 생산자물가지수(Producer Price Index, PPI)를 발표함.
  - 전월 대비 (계절 조정 후) 0.9%, 전년 동월 대비 (계절 조정 전) 3.3% 상승
  - 식품·에너지·무역서비스를 제외하면 전월 대비 0.6%, 전년 동월 대비 (계절 조정 전) 2.8% 상승
- 중간재 수요가격지수(Intermediate demand price indexes)
  - 가공재: 디젤 연료(11.8%)를 중심으로 0.8% 상승
  - 비가공재: 우유(9.1%)를 중심으로 1.8% 상승
- 서비스 중간재 수요가격지수(Intermediate demand price indexes for services)
  - 서비스: 전월 대비 0.8% 상승, 2024년 1월 이후 최대 기록
  - 특히, 증권 중개·투자자문(3.2%) 및 무역서비스(2.0%) 상승이 두드러짐.
- ❖ 고용 둔화(주간브리프 Vol.30)와 소비자물가 상승세(주간 브리프 Vol.31) 속에서 발표된 이번 생산자물가지수 급등은 연준의 9월 정책 판단에 변수로 작용하며,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증폭시킬 것으로 보임.

| 2024년 7월~2025년 7월 미국 생산자물가지수 추이(전월 대비) |





## 국내 경제 동향

### ○ 최근 인구·고용 동향 | 2025-08-21 국회예산정책처

- 2025년 8월 21일 국회예산정책처는 「인구·고용동향 & 이슈」를 발표하며 최근 인구 구조와 고용시장 변화를 분석함.
- 인구 구조 현황('25년 6월 기준)
  - 2025년 6월 총인구는 5,276만 명, 전년 동월 대비 6만 명 감소
  - 생산연령인구(15~64세): 3,565만 명, 전년 대비 26만 명 감소
  - 65세 이상 인구: 1,057만 명, 사상 최초로 비중 20% 돌파
  - 유소년 인구(0~14세): 654만 명, 전년 대비 4만 명 감소
- 고용 현황('25년 6월 기준)
  - 고용률: 63.2%, 전년 동월 대비 0.3%p 상승
  - 취업자 수: 2,938만 명, 전년 동월 대비 15만 명 증가
  - 실업률: 3.1%, 전년 동월 대비 0.2%p 감소
- 산업별 취업자 증감
  - 서비스업: 보건·복지, 숙박·음식점, 전문·과학·기술서비스를 중심으로 22만 명 증가
  - 제조업: 전자·기계 중심으로 4만 명 감소
  - 건설업: 2만 명 감소
- 연령별 취업 동향
  - 60세 이상: 18만 명 증가, 고령층의 고용 확대 지속
  - 30~59세: 2만 명 증가
  - 15~29세: 5만 명 감소, 청년층 고용 감소세

### | 유소년, 생산연령, 고령 인구 비율 |



자료: 행정안전부, 「주민등록인구」



## 세계 농업·농정 동향

### ● 일본 농림수산성 재해 평가 효율화 발표 | 2025-08-15 농림수산성, 2025-08-19 농림수산성

- 일본 농림수산성은 8월 집중호우로 전국 24개 부현 약 3,800개소에서 농작물 및 농업·축산용 시설이 침수되고, 산사태, 토사 유입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함.
- 농림수산성은 관계 부처·지자체와 협력해 긴급 조사와 복구를 추진함과 동시에, 8월 19일 '재해 평가 효율화' 방침을 발표하여 피해 농가를 지원하고 대규모 재해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.
  - '재해 평가 효율화'는 2017년에 마련된 규정으로, 대규모 재해 발생 시 농림수산업 관련 복구사업의 국고보조금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임.
  - (대상시설) 「농림수산업시설 재해복구사업비 국고보조의 잠정조치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농지, 농업용 시설, 임도
  - (대상지역) 2025년 8월 6일부터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가 과거 5개년 평균을 초과한 지역이 적용 대상임. 8월 17일 기준으로 아키타현, 니가타현, 도야마현, 후쿠오카현 등이 해당됨.
- 이번 집중호우 대응 과정에서는 기존 규정을 바탕으로 서류 심사 기준, 채택 보류 기준, 심사 자료 요건 등이 완화·조정되어 적용됨.
  - (서류 심사 기준 완화) 기존에는 500만 엔 미만 피해만 서류 심사가 가능했으나, 앞으로는 전체 피해 액수의 약 70%(농지·농업시설은 90%)까지 현장 조사 없이 처리 가능
  - (채택 보류\* 기준 완화) 기존에는 2억 엔 이상 재해 복구 사업은 모두 채택 보류 대상이었으나, 앞으로는 그중 약 60%까지는 보류 없이 현장에서 승인 가능
  - (심사 자료 첨부 간소화) 항공사진 활용 등으로 첨부 자료 작성 절차를 간소화
- \*채택 보류는 재해 복구 사업비 추정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, 현장에서 승인을 보류하고 농림수산성이 예산 규모 및 적정성을 검토해 최종 승인하는 절차를 의미
- 이러한 조치를 통해 현장 조사와 채택 보류 건수를 줄이고, 심사 준비 기간을 단축하여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할 계획



## 국내 농업·농정 동향

### ● 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 ‘농촌 인구이동’ 콘텐츠 구축 및 주요 지표 분석 | 2025-08-18 농림축산식품부; KASS

-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정책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, ‘농촌 인구이동’ 콘텐츠를 구축함.
  - ‘농촌 인구이동’ 콘텐츠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, 단순한 인구 조 수치 제공을 넘어 시계열 변화, 인구이동 흐름, 공간 분포 등을 시각화하여 통합적으로 제공
  - 읍·면 단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불균형 심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쉽게 파악하고, 정책 대응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- ‘농촌 인구이동’에 따르면 7월 기준 전국 지방소멸위험지수\*는 0.56으로 ‘주의 단계’에 해당함. 전월(0.57) 대비 0.01 하락하며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.
  - 지방소멸위험지수는 ‘한 지역의 20~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’으로, 소멸위험지수가 0.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함.
- \*젊은 여성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지방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미스다 히로야(2014)의 저서 「지방소멸」의 핵심 내용에 착안하여 2015년 처음으로 개발하여 사용됨.
- 반면,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한 인구는 60,969명으로 전월(50,144명) 대비 21.6% 증가함.
  - 특히 청년층(20~39세)은 27,412명으로 전월(21,047명) 대비 30.2% 늘어나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임.
- ❖ 지방소멸위험지수는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지방소멸 위험이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함. 이는 청년층 유입이 일 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고령층 인구 증가와 젊은 여성 인구의 상대적 부족이 더 크게 작용하여 지수가 하락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.

| 2024년 4월~2025년 7월 지방소멸위험지수 |

구분	지방소멸위험지수	
소멸위험 매우 낮음	1.5 이상	
소멸위험 보통	1.0 ~ 1.5 미만	
주의단계	0.5 ~ 1.0 미만	
소멸위험지역	소멸위험진입단계	0.2 ~ 0.5 미만
	소멸고위험지역	0.2 미만

